

우리는 제주4·3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제주4·3사건의 본질과 현안을 중심으로 -

전, 제주경찰서장 김 영 중

변질된 본질은 규명해야 하고 왜곡된 진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머 리 말

74년 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는 유사 이래 최대 참극인 4·3사건이 발발했다.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이 극한 대결 상황에서 어떤 이념과 체제로 건국하느냐를 놓고 사생결단 충돌하면서 초래된 사건이다.

이제 세월도 지났고 화해 상생하자는 말도 많이 한다. 옳은 방향이고 당연히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권력과 이를 배경으로 한 학계나 단체들이 위력으로 역사적 잘못을 부인하는 등 4·3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며 그들의 일방적이며 홍수 같은 교육, 선전, 홍보에 진실은 묻히고, 화해는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만 내재하고 있다.

이에 4·3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4·3의 성격부터 진행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본 후 현재 무엇이 현안인지 말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알고, 진심으로 제주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화해 상생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제주 4·3의 과거 - 4·3 주체와 성격 규정 ⊙

1.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이다. 남로당은 스탈린과 소련군 제25군 연해주군관구 정치사령관 스티코프의 지령을 받고 1946년 11월 23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 등 3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으로 통합한 정당이다. 제주도에선 공산당제주도당만 있었고 인민당이나 신민당은 하부조직이 없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남로당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공산당제주도당은 종전 이름 그대로 계속 활동하다가, 1947년 3·1운동기념투쟁을 앞둔 2월 12일이 되어서야 애월면에서 비밀리에 회합하여 당명과 간판을 남로당제주도당으로 바꿔 달았다.

그러하니 4·3을 일으킨 주체는 이름이 남로당제주도당일뿐 사실상 공산당제주도당이라고 규정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대담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쳐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자 남한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3개월 후 3당을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였으며 당의 이름도 북한을 추종하여 명명한 것이다.

2. 남로당제주도당 당원은 몇 명인가?

당시 제주도 내 이념지형과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남로당원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제민일보4·3취재반이 낸 『4·3은 말한다』에 의하면 남로당원은 1947년 3·1기념투쟁 당시 1,000~3,000명, 1948년 4·3 발발 당시 5,000~6,000명, 그해 초여름 경에는 족히 30,000명이나 되었다.

나.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1948년 8월 2일 제주를 탈출할 때 북한정권수립지원 투쟁의 일환으로 시행한 52,350명의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였다.

다. 1946년 10월 29일 제주도에서 선출된 과도입법의원예에 당선된 좌파 문도배와 김시탁은 12월 12일 개원식에 불참하고 13일 서울 민전회관에 나타나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라. 당시 남로당제주도당은 스스로 5만 당원이라고 선전하였다.

마. 미군정은 제주도민 70%가량이 남로당에 호의적이라고 분석했다.

바. 1948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군·경과 각 정보기관 그리고 포로 5천여 명을 심문 조사한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활동보고서’에 의하면,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파견되었고 공산주의와 그 목적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를 하는 500~700명 정도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 조직책들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 6만~7만여 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인원은 선전·선동에 현혹된 무지한 농어민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는 이에 따라 그 숫자에 차이는 있겠지만 남로당이 전도적으로 각계각층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여기서 핵심 주동자는 4·3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남로당은 무슨 목적으로 4·3사건을 일으켰는가?

남로당 강령 제2호를 보면 그 목적이 ‘조선에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4·3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 내고 소련과 북한 노선에 따라 공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행한 폭동이고 반란이다.

DJ 정권 때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임동원의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이론을 빌리면 제주도4·3반란은 남로당이 군중을 선전 선동하여(부자 가난 없는 좋은 세상 건설) 군중을 동원하고(3·1기념투쟁) 군중을 조직하며(민전, 민청, 전평, 부녀동맹, 교원조합 등) 점차 무장하여(인민해방군 조직) 게릴라전을 전개하고(4·3사건, 선전포고) 6·25남침전쟁과 같은 정규전과 연결하여(인민군지원환영회) 중국에는 공산통일을 위한 혁명전쟁의 일환이라 하겠다.

흔히 좌파 지식인들은 제주4·3사건을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당화하는데 공산주의 최고 보루인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현실을 보고도 남로당의 ‘통일투쟁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틀렸다. 남로당의 통일투쟁의 최종 목표는 북한노선에 따른 공산화 통일투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건국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옳았고 정당하며 세계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조금만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1946년 2월 8일 사실상의 단독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나 1947년 2월 20일 확실한 단독정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출범하여 우리보다 먼저 단독정권을 수립한 사실을 외면한다. 또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분단 책임도 무시한다.

4. 4·3사건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가?

1948년 4월 3일 발발하여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송당리 경 토굴에서 체포하고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함으로써 만 9년 만에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러나 4·3사건의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개방일까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947년 3월 1일을 4·3의 기점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3·1발포사건이라는 돌발적사건을 빌미로 민중항쟁론을 합리화하려는 저의가 있다. ‘3·1발포사건’이 4·3의 시작이라면, 지금 시행하는 4·3희생자 추념일도 4월 3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바뀌어야 하고 추념일 명칭도 3·1희생자추념일로 하는 것이 맞다.

또한 4·3사건의 終期를 1954년 9월 21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날 이후 진압 작전은 계속되어 경찰관 4명이 전사했다. 남로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8년 7개월 17일간이나 끈질기게 저항한 반란사건이다.

5. 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과연 몇 명인가?

4·3정부보고서에는 25,000~30,000명이고, 그 당시 남로당이나 지금 북한은 시종일관 30,000명을 주장한다. 이 3만 명 설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70주년 4·3 추념사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과장되었다. 2022년 3월 14일 제28차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정된 자는 사망자 10,446명, 행불자 3,642명, 후유장애자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4,577명이다. 4·19 직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넘게 조사하고 신고를 접수해 확정된 숫자다. 그러나 신고 결정된 자

중에는 4·3과 무관한 자, 자연사한 자, 월북한 자, 일본 도피자 등이 적지 않게 보인다.

⊙ 제주 4·3의 현재 - 아직 끝나지 않은 4·3 ⊙

6. 4·3사건 관련 수형자(受刑者)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은?

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으로 추정된다.(제주일보 2022.8.11. 1면) 그중 1명이 2020년 12월 제주지방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금 1억5,462만 원을 받았다. 2022년 3월 33명을 시작으로 6월 21일 14명까지 4차에 걸쳐 제주지법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수형인은 모두 52명이다. 특히 8월 10일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하였고 관련 입법도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화 될 것이다.

군법회의 수형인은 2,530명이다. 이중 18명이 처음으로 2019년 1월 제주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금 총 53억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개인별로는 최소 8천만 원, 최고 14억7천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총당할 배·보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형사보상금 이외에 또 위자료청구가 남아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24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2021년 10월 1심 선고가 나왔으나 결과에 불복하고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에 항소하여 2022년 8월 첫 변론이 시작된 상태이다.

진행 중인 군법회의 특별재심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 8월 9일까지 총 250명이 법적 절차 미비 또는 유죄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합동수행단'이 제주지법에 20~30명씩 일괄 청구하여 2022년 3월 1차부터 일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만간 군법회의 수형인 전원이 무죄를 받고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법적 제도적 장치나 절차, 훈련이 부족하였고 극도의 혼란기였으며 그나마 6·25전쟁으로 관련 문서가 없어져 유죄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수준과 시대적 상황을 헤아려 판단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의 잣대로 재판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직권재심청구신청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4·3특별법에 따라 무더기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억울한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7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일반재판과 군법회의 수형자 전원이 일괄하여 무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로당의 ① 대한민국 건국반대 투쟁 ② 제주4·3사건 도발 ③ 5·10선거

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무효화 ④ 북한정권창설 지원투쟁으로 지하선거 실시 ⑤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⑥ 6·25남침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 ⑦ 5·10선거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64명을 학살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가해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9년간 지속된 제주4·3사건에서 가해자인 남로당은 통일운동세력이 되고 주동자는 통일유공자로 자리매김하여 막대한 보상을 받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세력은 反통일세력이 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의 주체로서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김정은 체제도 아닌데 이 지경이 되어 정통성과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가 변질되고 전도되어 가는가? 이게 진정으로 옳은 일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1949년 10월 2일 게릴라 249명을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비행장 인근의 해안가에서 처형했다는 미군정기록으로 보아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실을 아무 근거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25 때 출옥하여 일본으로 도피한 수형인 김민주(정역 7년, 호적명 김태형)나 문국주(무기정역, 본명 문옥주)의 행적, 언질, 저술을 보아도 그렇다.

여기서 필자는 수형인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대는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가? 남로당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 테러, 협박, 선전선동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 또는 협조한 사실이 없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없다’고 답하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는 재심선고대로 확실히 무죄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비록 법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과 역사적으로는 확실히 유죄다

7.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진설된 위패는 모두 적격자들인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위패봉안실에 진설된 위패 중에는 부적격자가 많이 있다. 4·3을 주동한 남로당제주도당 및 제주읍특별위원회 간부, 인민해방군 및 구국투쟁위원회와 혁명투쟁위원회 간부, 2연대 앨범에 수록된 자, 2연대와 9연대 탈영 입산 군인, 군·경 프락치, 『4·3은 말한다』 및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과 『4·3장정』이나 『이제사 말함수다』, 미군정보고서, 기타 경찰기록 등에 수록된 핵심들, 북한 인민군, 남파간첩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화해·상생이란 거창한 구호 아래 미동도 없다. 이들은 엄연한 4·3가해자이지 4·3희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을 뛰어넘어 전부 희생자로 둔갑해 9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되었다.

8. 제주4·3평화공원 영상물이나 전시물은 공정하고 바르게 되어 있는가?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발행한 『좌익사건 실록』에 따르면 제주4·3이나 9월총파업을 각 1건으로 계산해도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 남로당은 총 977개의 폭동을 일으켰다.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 벽에는 해방 후부터 6·25전쟁 전날까지 군·경 전사자만 8,824명이다. 남로당이 저지른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의 실상이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10선거 때 선거인 등록률 96.7%, 등록자의 89.8%가 투표해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국민 절대다수가 참여하고 지지하여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평화공원 전시물이나 설치물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간결하다. 너무나 좌편향적이고 내용도 왜곡 날조되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여기서는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증오의 대상인 나라, 자학사관의 교육장이 되어 있다.

◎ 제주 4·3의 미래 - 진정한 화해·상생을 위하여 ◎

진정한 화해·상생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간절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군·경의 정당한 진압 임무를 왜곡하여 국가폭력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해서는 화해가 어렵다. 지역저항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제정치로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수립 과정 및 현실을 알아야 한다. 증오의 감정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는 마음, 역사적 진실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로 마주 앉으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9. 제주의 미래를 위해 4·3 관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가. 4·3사건 당시 인명 피해자들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들

(1) 무고한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4·3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군·경도 무섭고 山사람도 무서운 가운데서 전전공공하다가 양쪽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전쟁은 본래 지옥인 것이다. 이들의 과거 고난을 글로 쓰라면 소설 한 권으로 족할까?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희생자 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 희생된 5·10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들에 대한 시선

이 희생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2천여 명으로 본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들이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새 나라를 건국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원 현충원 등 국가 유공자묘역에 있어야 하는데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핵심 세력들과 무고한 희생자와 같이 뒤섞여 있다. 화해상생이란 명목에 묻혀 그들의 들러리로 격하

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3) 남로당 간부 등 4·3사건을 일으킨 핵심 세력에 대한 시선

反대한민국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자들이다. 보는 이에 따라 1,500~3,500명 또는 그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일본으로 도피한 4·3주동자 김봉현·김민주가 실토한 3,000여 명을 핵심으로 본다.

이들 남로당 4·3주동자나 적극가담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4·3을 일으켰으며, 도민 1만여 명 이상의 생명을 잃게 한 원인 제공자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보상을 준다면 4·3사건 당시 대한민국 방침에 적극 호응한 선량한 도민들에게 주는 게 더 옳다. 그들은 해안마을로 소개(疏開)하라면 소개했고, 복귀하라면 복귀했고, 성담을 쌓으라면 쌓았고, 보초를 서라면 보초를 섰고, 노력 동원에 나오라면 불평 없이 나갔으며 물심양면으로 군·경을 지원한 숨은 애국자들이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숨은 공로자들이다. 이들은 4·3 광풍의 혼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과 혜택이 반대로 남로당 4·3주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3주동자들에게 추모나 보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들 자신도 공산통일혁명戰士로서 공산통일혁명戰史에 길이 남기를 바랄 것이며 대한민국의 추모나 보상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상을 원한다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게 순리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격랑에 떠밀려, 그들과 함께 행동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역지사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란 냉엄한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연 그들이 택한 이념과 행동이 옳았느냐를 역사는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다.

(4) 남로당 핵심 세력 유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버지가 공산당을 했던 4·3에 가담했던 그 문제는 아들이 알 수도 없고 책임 또한 없다. 그들은 오로지 생물학적 자식일 뿐이다.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랐고 성장한 후 사회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연좌제로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원망하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진짜 4·3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과 원망이 뒤섞일 수밖에 없다. 죄과를 전해 들었다 해도 家系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렬할 것이다.

지인들이 있다 해도 비디오로 촬영해 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다. 이점을 이용하려는 유혹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남아 있다. 여기서 해당 유족들은 감성보다 이성적 사고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4·3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여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협상과 이해의 폭은 확대될 것이며 화해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가 엄존한다. 정치권의 개입과 좌파측의 선동과 회유가 있어서다.

나. 4·3 당시 정부 측을 바라보는 시선

당시 4·3진압작전을 수행한 군·경을 국가폭력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도민 3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매도하는 실정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70, 72, 73주년 추념사에서 ‘국가 폭력’이라는 말을 9회나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로당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된 주장에 기인한다. 당시 국제 정치적으로 보나 해방 이후의 혼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5·10 선거를 앞두고 4·3무장폭동을 방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 즉 진압의 당위성이 있었다.

4·3정부보고서에 기록된 가해자별 통계를 보면 토벌대가 10,955명(78.1%)이고 남로당 공비들이 살해한 숫자는 1,764명(12.6%)이다. 인민유격대가 가해한 숫자가 토벌대에 비해 훨씬 적지만 그들의 잔인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시 조천리에 살던 이월색 1936년생 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남로당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10일 父, 母, 숙부, 동생 9세, 7세, 4세, 3세, 2세 등 8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남원리에 거주하는 정남국(일명 정남휴) 1916년생은 민보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28일 임신 6개월 된 부인, 자식 10세, 8세, 6세, 누이동생 25세, 그의 자녀 3세, 2세, 1세, 둘째 누이동생 17세, 집에 같이 살던 외가쪽 친족 아이 15세 등 1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이런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하기도 했다. 끔찍한 일이다.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고 건국 후에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했으며, 6·25가 터져 대구, 부산, 제주도만 남았을 때 남로당은 읍면별로 북한 ‘인민군지원 환영회’를 조직하고 한라산 빨치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통일을 획책했다. 이를 두고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남로당을 역사적으로 면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 따라서 당시 상황과 4·3의 성격 하에서 진압 군·경의 공과를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험난했다. 무고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군·경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27만여 명의 선량한 제주도민을 지켜냈고, 김일성의 공산 치하 생지옥을 막아냈다. 남로당의 末路처럼 숙청되거나 요덕수용소 신세를 면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군·경의 공로를 인정한 후에 비판과 무고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맺 는 말

지금까지 4·3에 대하여 생각나는 몇 가지를 대강 살펴봤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소련과 북한 노선에 따라 공산통일을 위하여 무장 폭력을 행사한 폭동이고 반란이다. 이것이 4·3의 성격이고 본질이다. 남로당의 강령, 구호, 만세, 깃발, 노래, 벽보, 삐라, 연설, 신문, 지령문 등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남은 이념논쟁을 걷어치우라’는 공세로 인해 4·3 주체인 남로당은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모조리 묻혔다. 심지어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4·3’이라고 남로당과 4·3반란을 미화하고, 4·3주동자를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4·3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4·3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무고한 도민 희생이 있었다. 이것은 4·3을 진압하면서 초래된 부차적 사안이다. 4·3의 진실과 본질을 규명하고 난 후에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것도 쌍방 공히 비판할 일이다.

4·3은 이제 74년이 지났다. 제주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화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가 자기 측의 역사적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세로 마주 앉아야 한다. 4·3진압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이들을 기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남로당의 공산통일을 위한 폭동 반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중항쟁으로 굳히려 한다면 화해는 요원하다. 최근에는 4·3을 통일운동으로 미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3주체가 추구한 목표를 통일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공산통일 운동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쌍방이 각자 양심으로 돌아와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좌파는 6·25복침설을 주장했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나 심지어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 오르타 노벨평화상 수상자 까지 불러다가 그 유명세를 이용하여 왜곡 날조된 사실을 고착화하고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파에게는 이에 대처할 사람도, 조직도, 예산도, 통로도 완전 차단되어 있다. 제주4·3史가 정립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점은 확실한데도..... .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연하고 싶다.

2022년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당선자의 4·3 추념사에는 마땅히 제일 먼저 대한민국 건국 희생자인 군·경과 애국인사를 추모하고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다음, 남로당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나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그 유족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보상과 명예 회복 방침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추념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제주4·3사건이 폭동·반란인 이유

1. 남로당제주총당¹⁾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무장 폭동·반란을 일으켜 1957년 4월 2일까지 만9년 간 대한민국에 항적하며 5·10총선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56명을 살해했다.²⁾
2. 1948년 4·3사건 발발 후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을 개방할 때까지³⁾ 제주도내 모든 마을 주위에 성을 쌓고, 남로당 공비들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막기 위하여 남녀노소가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경비를 서게 했다.⁴⁾
3. 남로당제주총당은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 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 하였다.⁵⁾
4.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선거인 등록율 91.7%, 투표율 95.5%로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를 6) 받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남로당제주총당은 8년 7개월 17일 간 항적하였다.
5. 4·3주동자 남로당제주총당 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박헌영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5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⁷⁾
6. 김달삼은 1949년 8월 북한 강동정치학원 출신자 300명으로 구성된 제3병단을 이끌고 태백산지구에 남파되어 대한민국 전 북을 획책하였다.⁸⁾ 또한 이덕구는 제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서, 1948년 10·19여순반란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적했다.⁹⁾ 북한은 김달삼과 이덕구에게 국기훈장 2급과 3급을 줬고, 평양 신미동 애국 열사묘역에 묘비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¹⁰⁾
7. 4·3주동자 김달삼·안세훈·강규찬·고진희·이정숙·문등용은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섰다.¹¹⁾
8. 남로당제주총당은 6·25전쟁 발발 직후, 국군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각 읍면별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빨치산과 합세,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인민군이

1)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 전남에서 분리, 道로 승격하였으나 남로당제주총당은 계속 전남도당의 지휘를 받았다. 그래서 공식 당명도 '남로당제주총당위원회'였다.

2)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바로알기」, (2014), 41쪽.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356쪽.

4) 마을 주위 축성(築城) 시기는 마을마다 일정하지 않다. 특히 중산간 마을은 소개령과 그 해제로 인한 복귀 및 파괴된 주택재건 시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안덕면 화순리는 1948.8월, 애월읍 남읍리는 1949.4.29.소개령 해제 이후부터이다.

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10쪽.

6)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현암사, 2001), 571쪽.

7)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1995), 258~259쪽.

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1995), 94~95쪽.

9)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오사카 문우사, 1963), 165쪽.

10) 김영중, 「제주4·3사건 문과 답」 제3판, (제주문화, 2021), 478, 479쪽.

11) 김남식, 「남로당 연구」 1권, (돌베개, 1984), 530~531쪽.

- 상륙하면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다.¹²⁾
9. 월북한 4·3주동자 안세훈·강규찬·고진희·조몽구 등은 6·25 때 북한군과 함께 남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¹³⁾
 10. 제주4·3발발의 주체는 남로당이고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 강령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이후에도 계속 항적하였다.¹⁴⁾
 11.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은 인공기를 곳곳에 게양하였고 적기가와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자행하였다.¹⁵⁾
 12.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방송의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¹⁶⁾
 13.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은 4·3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라는 증언을 하였다.¹⁷⁾
 14. 제주도민전 문화부장으로 1947년 3·1기념투쟁을 진두지휘한 김봉현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쓴 책에서 3회나, 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명기했다.¹⁸⁾
 15.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를 의결하면서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제주도 반란’이라 규정했다.¹⁹⁾

12)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오사카 문우사, 1963), 257쪽.

13)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39~40, 84, 279~280, 379~380쪽.

14) 제주도경찰국(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사」, (1990), 남로당강령, 287~288쪽.

15)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1쪽.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오사카 문우사, 1963), 153~154쪽.

16) 한라일보 1998.11.24.

17)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권, (한울, 1989), 198쪽.

18)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오사카 문우사, 1963), 113,116,148쪽.

19) 「관보」 제14호, 1948.11.17.